

#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이재철 | 서강대학교

## | 논문요약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경제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경제 이슈가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했으며, 그 결과 대기업 CEO출신인 이명박 후보자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통해 당선됐다. 본 논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수집한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인 경제상황과 국가 경제상태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판단과 전망적 판단을 모두 고려했지만 전망적 투표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국가경제와 개인경제를 비교 분석하면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 및 전망적 투표에서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이번 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여 경제 투표의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미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네 가지 유형의 경제 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 I. 서론

2007년 12월 19일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10년 만에 보수진영으로 교체되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싸웠던 후보나 개혁적 성향의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었지만 이번 선거는 아니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2.9%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낮았다.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70.8%보다도 7.9% 하락한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평균 지지율 50%를 넘긴 첫 야당 출신 후보였으며 세대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또한 호남 지역을 제외한 13개의 시·도에서 최다 득표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지역에서 승리했다. 1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2위를 차지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득표 차이는 약 532만 표로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경제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하이테크로 무장한 일본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위기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확산된 세계적 금융 불안, 사상 최고의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실업률 증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때문에 한국 유권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분석이 많았다(세계일보 2007/12/20). 이번 선거는 다른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경제 이슈가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했으며, 그 결과 대기업 CEO출신인 이명박 후보자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과거 몇 년 동안의 경제상황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집권당 후보자를 지지했는가? 혹은 지지를 철회했는가? 유권자들은 실업, 경제성장, 양극화현상, 물가 등의 경제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판단하여 투표를 결정했는가?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가정의 경제 사정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가? 경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다른 변수들보다 후보자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본 논문에서 분석할 연구 질문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보다도 경제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경제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특성을 중시하는 콜롬비아 학파와 정치심리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미시간 학파 모두 투표결정요인으로 경제투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정환울 2007). 서구사회에서는 300편 이상의 논문이나 서적이 출판될 정도로 경제투표는 학계에서 크게 관심 있는 분야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도 경제와 선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은국 2001;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그러나 그동안 한국 선거연구에서는 지역주의와 같은 압도적인 투표결정요인 때문에 경제투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박경산 1993; 이동윤 1996; 이현우 1998; Kim 1999).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녔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투표결정 요인으로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투표의 개념을 알아보고, 유권자의 경제 인식과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논문의 연구 가설, 데이터, 연구모델, 변수 측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경제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변수와 후보자 선택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경험분석의 요약과 함께 논문의 함의 및 한계에 대해 논할 것이다.

## II. 경제투표

경제투표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경제적 사안을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하고 이를 평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박경산 1993). 특히 개인이 경제에 대하여 갖는 인식은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lasgow 2005).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정한울 2007). 특히 경제투표는 국회의원선거보다도 대통령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대통령 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투표로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이동윤 1996; 이현우 1998). 그러나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경제투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진다.

첫째, 경제투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지(pocketbook voting, 개인적 경제투표), 아니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표행위를 결정하는지(sociotropic voting, 국가적 경제투표)에 대해 연구한다(Glasgow 2005;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전망이 투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즉 유권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화를 근거로, 그 변화에 대해 만족하게 되는 경우 집권당이나 집권당 후보에게 투표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정당을 지지하여 집권당을 심판한다. 동시에 이들 유권자들은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와 같은 집합적인 형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투표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경제 상태가 개인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 상황이 모두 경제투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사적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유권자들은 개인경제의 어려움이 정부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적인 이유나 직장의 변화 때문에 가계형편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경산 1993; Kinder and Mebane 1983). 경제투표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상태를 더 중요시한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개인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보다 투표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Erikson and Tedin 2005). 이들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국가의 경제 상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기준으로 집권당이나 집권당의 후보에 대해 상이나 벌을 준다. 한국의 경제투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상태보다는 국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했다(이현우 1998; Jhee and Shin 2007).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가 경제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데 이때 정부는 개인경제보다 국가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Hellwig 2001; Kiewiet 1983).

둘째, 경제투표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논쟁은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종류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망적 투표형태(prospective voting)와 회고적 투표형태(retrospective voting)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회고적 투표는 과거에서 평가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현직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다(정한울 2007).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여 만족하는 유권자들은 현직자나 집권당을 지지하지만,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회고적 투표란 유권자들이 집권당이나 현직자의 경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상과 벌”로써 투표 선택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강원택 1999; 이현우 2006; Fiorina 1981).

그러나 유권자들은 정부나 정당들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경제정책의 결과인 경제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에서 회고적 투표는 직관적이고 비교적 세련된 유권자들 가정해야 하는 전망적 투표보다 합리적이다(이현우 1998). 또한 집권당이나 집권당의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근시안적이다. 유권자들이 경제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비교적 오래된 과거의 시점보다는 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경제상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이은국 1999).

회고적 투표는 집권당이나 현직자의 경제적 업적을 평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현직자를 선택할 때에는 그들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들보다 나

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반대당이나 반대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은 아니다. 즉 회고적 투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거나 혹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아니다(Fiorina 1981). 반대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가 비합리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현우 1998). 이밖에 경제상황의 정도에 따라 경제가 투표에 주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경제상황이 나쁜 국가에서 경제의 완만한 약화는 선거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지만 경제상황이 좋은 국가에서의 실업률이나 물가의 작은 변화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재한 1993).

반면에 전망적 투표는 시기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시점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타나는 행위이다(정찬울 2007). 전망적 투표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두고 미래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전망적 투표는 다운스(Anthony Downs 1957)의 합리적 투표 모델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다운스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대치를 비교하여 투표행위를 하게 되는데, 기대 효용 산출의 근거 중 하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경제업무 수행능력이다.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을 비교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전망적 투표는 회고적 투표와 다르게 유권자들이 경제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능력과 경제정책을 비교하여 투표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현재의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당이나 후보자를 그렇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자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Rogoff 1995). 그러나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Persson and Tabellini 1990). 또한 경제위기의 책임이 집권당에 있는 경우라도 경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집권당이나 집권당 후보에게서 찾을 가능성도 있다(황아란 2000).

전망적 투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유권자들은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문제 중 어떤 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야 한다. 셋째, 정당이나 후보자 사이에 경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Kiewiet 1981). 그동안 한국의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망적 투표가 회고적 투표보다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박경산 1993; 이현우 1998; Jhee and Shin 2007). 이상의 논의에서 경제투표는 크게 국가 회고적 투표, 국가 전망적 투표, 개인 회고적 투표, 개인 전망적 투표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III. 경험분석의 틀: 가설 및 분석모형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가설 1〉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집권당 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거나 다른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 〈가설 2〉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가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고 집권당 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거나 다른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 〈가설 3〉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앞으로의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설을 검증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후보자 선택} = \alpha + \beta_1 * \text{국가경제회고} + \beta_2 * \text{국가경제전망} + \beta_3 * \text{개인경제회고} + \beta_4 * \text{개인경제전망} + \beta_5 * \text{경상도} + \beta_6 * \text{전라도} + \beta_7 * \text{충청도} + \beta_8 * \text{이념} + \beta_9 * \text{성별} +$$

$$\beta_{10} * \text{연령} + \beta_{11} * \text{교육} + \beta_{12} * \text{수입} + u$$

위 모델에서 후보자 선택은 종속변수이다. 종속변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분법적(polytomous)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회고, 국가경제전망, 개인경제회고, 개인경제전망, 이념은 독립변수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연령, 교육, 수입정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통제변수이다.  $\alpha$ 는 상수이고  $u$ 는 오차이다.

경제인식과 관련된 변수들, 즉 국가경제회고, 국가경제전망, 개인경제회고, 개인경제전망은 -2에서 2까지 모두 5점 척도로 코딩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 2점에 가깝다. 반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나 이명박 정부 시기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면 -2점에 가깝다.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즉, 경상도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이 경상도인 경우 1 아니면 0으로, 전라도는 거주지역이 전라도인 경우 1 나머지 지역은 0으로, 충청도는 거주지역이 충청도 지역이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했다. 이념의 경우 매우 진보에서 매우 보수까지 11척도로 측정했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로 여자는 0으로 코딩했다. 연령은 20대 혹은 미만에서 60대 혹은 이상까지 5척도로 코딩했고, 교육은 중졸 이하는 0, 고졸 이하는 1, 대학 이상은 2로 코딩했다. 수입은 여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월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로 코딩했고 501만 원 이상일 경우 6으로 코딩했다.

본 논문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관이 되어 실시한 설문조사를 사용했다. 이 설문조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07년 12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의 크기는 1,201이었으며 응답률은 26.3%였다.



## IV. 분석 결과

### 1. 유권자의 경제 인식

먼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봤다.<sup>1)</sup> <표 1>에 나타난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유권자들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경제상황 및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5.7%와 8.9%로 낮았다. 특히 국가 경제상황과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매우 좋았다”고 표현한 비율은 각각 0.3%로 매우 낮았다. 반면 참여정부의 기간 동안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61.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39.8%보다도 약 21%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가정의 경제 상황보다는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상태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참여정부 시기 거시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경제정책의 결과는 좋았다. 참여정부가 국정을 운영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높았으며, 주식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의 심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실업률 및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악화되었던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응답자의 3/4 이상(76.0%)은 앞으로 차기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개인이나 집안의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과반수(55.3%)였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개인경제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비판

1)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은 “매우 좋았다”, “좋은 편이었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약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립적인 평가나 전망은 “그저 그렇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나 전망은 “나쁜 편이었다”, “매우 나빴다”, “약간 더 나빠질 것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표 1〉 유권자들의 국가경제와 개인경제 인식

	국가경제		개인경제	
	회고적 (A)	전망적 (B)	회고적 (C)	전망적 (D)
긍정적	5.7%	76.0%	8.9%	55.3%
중립적	32.8	18.6	51.1	38.7
부정적	61.0	3.8	39.8	4.6
N	1,201	1,201	1,201	1,201

적 시각이 높았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개인경제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표 1〉의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차이는 개인경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차이보다 컸다. 한국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 상태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지만 기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국가 수준의 경제 환경이 개인적 수준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이하 ‘유권자 의식조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유권자 의식조사’는 “선생님 맥의 경제적 가정형편에 정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2/3(64.4%)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표 2〉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경제인식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회고적 인식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전망적 태도는 그 변화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경제 상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변화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한 유형과 중립에서 긍정으로 변화한 유형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52.6%)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5(22.2%)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제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면서 실망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권자들이 느끼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경제 사정에 대해 두 정권 사이에 부정적인 회고나 중립적인 회고의 태도를 보이다가 긍정적인 전망을 지니게 된 유권자들의 비율은 각각 26.7%와 24.8%로 반수 이상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가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비율(26.7%)은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의 비율(52.6%)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나타난 또 다른 차이점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사정이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정의 경제사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은 24.3%이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상태에서 나타난 비율(8.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 사이에는 경제상황

(표 2) 유권자들의 경제 인식 변화

회고적/전망적 변화	국가경제		개인경제	
	빈도	%	빈도	%
긍정 → 긍정	26	2.2	48	4.1
긍정 → 중립	28	2.4	49	4.2
긍정 → 부정	14	1.2	11	0.9
중립 → 긍정	261	22.2	293	24.8
중립 → 중립	101	8.6	287	24.3
중립 → 부정	24	2.0	24	2.0
부정 → 긍정	620	52.6	315	26.7
부정 → 중립	96	8.2	134	11.4
부정 → 부정	8	0.7	20	1.7
N	1,178		1,181	

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가? 분석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을 분석하면 그들의 과반수는 참여 정부 시기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평가를 했다. 이것은 두 종류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보다 높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기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21.6%)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17.7%)보다 높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경제인식을 분석하면 이명박 차기 정부 기간 동안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8.4%)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39.9%)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경제 상황이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61.8%)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8.3%)보다 높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경제보다 더 중요한 변수에 의해 투표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설문 결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를 선택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 기간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 74.6%와 50.1%는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해 “나쁜편이었다” 혹은 “나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회고적 투표의 비율보다 전망적 투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전망적 투표의 비율은 각각 94.6%와 72.3%로 회고적 투표의 비율보다 모두 20%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이명박 후보가 앞으로 보여 줄 경제 청사진을 고려하여 투표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은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은 국가경제의 경우 회고투표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던 많은 유권자들(64.9%)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경제를 악화시켰

〈표 3〉 후보자에 따른 유권자의 경제 인식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N(%)
<b>정동영</b>				
국가 회고적	20(12.9%)	84(54.2%)	51(32.9%)	155(100%)
국가 전망적	74(48.4)	61(39.9)	18(11.8)	153(100%)
개인 회고적	27(17.7)	93(60.8)	33(21.6)	153(100%)
개인 전망적	43(28.3)	94(61.8)	15(9.9)	152(100%)
<b>이명박</b>				
국가 회고적	10(1.6)	150(23.9)	469(74.6)	629(100%)
국가 전망적	593(94.6)	30(4.8)	4(0.6)	627(100%)
개인 회고적	26(4.1)	289(45.8)	316(50.1)	631(100%)
개인 전망적	451(72.3)	168(26.9)	5(0.8)	624(100%)
<b>이회창</b>				
국가 회고적	5(4.5)	34(30.6)	72(64.9)	111(100%)
국가 전망적	75(68.2)	32(29.1)	3(2.7)	110(100%)
개인 회고적	8(7.1)	66(58.9)	38(33.9)	112(100%)
개인 전망적	56(50.5)	52(46.9)	3(2.7)	111(100%)

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경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가 개인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가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지고 있던 비율의 절반이었고,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립적 의견의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전망적 투표 성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과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다.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각각 68.2%와 50.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개인경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과 앞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립적 입장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전망적 투표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후보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의식조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응답자의 71.9%는

참여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업적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응답자의 24.6%는 부동산 정책을, 35.4%는 경제정책을 가장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대다수가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또한 투표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경제관련 정책들이 이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2.0%는 경제발전, 6.8%는 양극화 문제, 4.6%는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유권자 의식조사’ 도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49.3%는 일자리 창출을 15.3%는 부동산 정책을 선택하는 등 대다수(64.6%)의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 이슈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은 후보자 간에 정책적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 이슈에 대한 문항과 선거에서 후보자 간에 정책적 차이에 대한 정도를 측정

〈표 4〉 관심 이슈와 정책 차이에 대한 인식

	빈도	비율(%)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없었다(%)
교육정책	107	8.9%	64.5%	35.5%
일자리 창출	591	49.3	64.2	35.7
환경문제	9	0.8	55.5	33.3
대북정책	33	2.8	69.7	27.2
부동산 문제	183	15.3	63.9	34.4
정치 개혁	168	14.0	73.2	26.2
재벌 개혁	16	1.3	43.8	56.3
합계	1,200	100	64.5	34.3

자료: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2) 이 밖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육 정책 9.6%, 인사정책 6.5%, 대북정책 4.8%, 한·미 FTA 8.0%, 정치개혁 4.4%, 재벌정책 2.1%이었다.

〈표 5〉 후보자의 국정능력 평가 인식

	남북관계	경제분야	정치분야	교육분야
정동영	6.1	5.3	5.5	5.5
이명박	5.4	6.9	5.9	5.6
이회창	5.3	5.5	5.9	5.6

자료: EAI 여론브리핑 제19호

하는 문항을 교차분석 했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 이슈를 일자리 창출 혹은 부동산 문제라고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후보자 간에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2%와 63.9%로, 유권자의 대다수는 어느 후보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임자인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후보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후보자들의 국정능력을 측정하였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5〉에서 보여주듯이 정동영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이명박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 후보가 정치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다른 분야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국정운영 능력 평가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상위를 유지했던 이유는 경제운영능력에 대한 우위가 국정능력 전반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경제인식과 후보자 선택

먼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이명박 후보 선택=1, 나머지 후보

선택=0)를 종속변수로 기본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종속변수는 양분변수(dichotomous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했다. <표 6>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으며 후보자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불만족을 표현했고 그 결과 야당 후보를 선택하여 집권당을 처벌하는 회고적 투표의 모습을 보였다. <표 6>의 분석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노무현 정부 기간에 국가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같은 시기 개인이나 가정 경제에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일수록 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전망적 투표의 모습도 보여줬다. 유권자

<표 6> 이명박 후보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변수	계수	한계효과
국가경제 회고	-0.239(0.11)*	-0.054(0.02)*
국가경제 전망	1.259(0.15)***	0.285(0.03)***
개인경제 회고	-0.400(0.12)***	-0.091(0.03)***
개인경제 전망	0.549(0.14)***	0.125(0.03)***
경상도	0.457(0.20)*	0.099(0.04)*
전라도	-1.533(0.32)***	-0.365(0.07)***
충청도	-0.365(0.28)	-0.086(0.07)
이념	0.025(0.04)	0.006(0.01)
성별	-0.099(0.17)	-0.023(0.04)
연령	0.157(0.08)*	0.036(0.02)*
교육	0.124(0.16)	0.028(0.04)
수입	0.002(0.06)	0.000(0.01)
N	953	
LR Chi-sq(12)	366.71***	
Log likelihood	-450.88	
Pseudo R-sq	0.29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들은 국가를 경영할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및 가정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경제 전망과 개인 경제 전망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로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모습이 나타났다. <표 6>에서 보여주듯이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으나 전라도 지역 유권자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62.4%의 득표율을 나타내 전국 득표율보다 13.7%가 높았으나 호남지역에서는 9.0%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10.3%, 호남지역에서 80.0%를 득표하여 이번 선거에서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현상은 나타났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강도(magnitude)에 대해 분석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나타난 계수의 비교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강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계산했다. 분석결과 이번 선거는 회고적 평가보다는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 국가경제, 개인경제와 관련된 전망적 투표의 한계효과 절대값(0.285, 0.125)이 회고적 투표의 절대값(0.054, 0.091)보다 컸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유권자들은 집권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위기를 이명박 후보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다. 개인의 경제사정과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한 비교는 혼합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가보다는 개인경제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경제보다는 국가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위의 논의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모델을 사용하여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분석모델은 이명박 후보 대 비이명박 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이명박 후보에는 이회창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혹은 이회

창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결정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유권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위에서 분석한 모델은 후보자 선택이라는 종속변수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후보자 선택이라는 종속변수가 다분법적(polytomous)이기 때문에 다변량(multi-nom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이 분석 방법은 복수 후보자들을 고려하여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에 대한 확률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된 후보자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현우 1998). 이명박 후보를 기준(base outcome)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과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투표결정 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국가 경제 및 개인 경제에 대한 회고적 인식과 전망적 태도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즉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투표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상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집권당의 당적을 지닌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에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참여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들이 체감하는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집권당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를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전망적인 경제평가를 하면서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나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결정했을 경우, 네 가지 경제인식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이었을까?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국가경제 전망(-0.082), 개인경제 전망(-0.056), 국가경제 회고(0.044), 개인경제회고(0.037)의 순서였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을 비교하면 두 후보자 사이에서도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6>에 나타난 분석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국가경제 인식과 개인경제 인식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명박 후보 대 비이명박 후보의 구도에서는, 회고적 투표의 경우 개인경

〈표 7〉 경제투표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정동영		이회창	
	계수	한계효과	계수	한계효과
국가경제 회고	0.575(0.17)***	0.044(0.01)***	-0.148(0.15)	-0.022(0.02)
국가경제 전망	-1.234(0.20)***	-0.082(0.02)***	-1.032(0.19)***	-0.099(0.02)***
개인경제 회고	0.542(0.18)**	0.037(0.01)**	0.359(0.16)*	0.034(0.02)*
개인경제 전망	-0.810(0.21)***	-0.056(0.02)***	-0.381(0.19)*	-0.033(0.02)
경상도	-1.008(0.34)**	-0.063(0.02)***	-0.159(0.27)	-0.009(0.03)
전라도	2.251(0.37)***	0.339(0.08)***	-0.071(0.66)	-0.051(0.04)
충청도	-0.761(0.53)	-0.050(0.02)*	0.805(0.33)*	0.119(0.06)*
이념	-0.035(0.06)	-0.003(0.00)	0.078(0.06)	0.009(0.01)
성별	-0.059(0.26)	-0.006(0.02)	0.151(0.24)	0.017(0.02)
연령	-0.168(0.11)	-0.012(0.01)	-0.091(0.10)	-0.008(0.01)
교육	-0.429(0.23)	-0.033(0.02)	0.127(0.22)	0.018(0.02)
수입	0.013(0.10)	0.001(0.01)	-0.018(0.09)	-0.002(0.01)
N	834			
LR Chi-sq(24)	373.62***			
Log likelihood	-486.29			
Pseudo R-sq	0.28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제를 회고하는 인식이 국가경제를 회고하는 태도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표 6〉 참조). 반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대 정동영 후보의 구도에서는 국가경제 상태를 고려하는 성향이 유권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태도보다 뚜렷이 나타났다(〈표 7〉 참조). 즉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 및 전망적 투표에서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 상태를 더 고려했던 것이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간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는 영향력을 나타냈다. 두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유권자들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투표행위를 했다. 그러나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미친 이 지역들의 영향력은 유권자들

의 네 가지 유형의 경제 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과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을 비교하면 경상도와 충청도의 지역주의는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전망적 투표보다도 영향력이 적었다. 이 지역의 표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라도의 지역주의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어떤 독립변수들보다도 정동영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주었다. 분석결과 전라도 지역의 한계효과의 절대값은 0.34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번 선거 결과 정동영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은 80%에 가까운 득표율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비교분석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권자의 네 가지 경제인식 유형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변수는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적 투표와 개인경제에 대한 회고적 투표였다. 유권자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이익이나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정운영자로 이회창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가 적임자라로 평가하여 투표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두 후보 가운데 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제 상황에 불만을 지닌 유권자들이 이회창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유권자의 거주지가 경상도와 전라도인 경우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충청도라는 지역적 요인이 이명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계수는 0.80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을 분석하면 37.4%와 28.5%로 이명박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충청도 지역에서 이명박 후보가 훨씬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수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인 경제상황과 국가 경제상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을 비교한 유권자들의 전망적 견해가 투표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판단과 전망적 판단을 모두 고려했지만 전망적 투표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불만이 표출되어 이번 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은 야당후보인 이명박 후보에게는 반사이익 수준을 넘는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는데 반해 범여권 대표주자인 정동영 후보에게는 끝까지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민심은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표출된 것이다. 지난 1년 이상 지지율 1위를 독주하며 끝까지 승기를 지킨 데는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세계일보 2007/12/20). 선거 내내 도덕성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경제부터 살려달라’는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둘째, 국가경제와 개인경제를 비교 분석하면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 및 전망적 투표에서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득수준과 세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험적 분석과 다른 결과이다(김욱 2006).

본 논문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경제투표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제14대, 15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경제투표의 모습은 지역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황아란 2000).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여

경제투표의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미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네 가지 유형의 경제 인식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과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을 비교할 때 경상도와 충청도의 지역주의가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력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전망적 태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호남의 지역주의는 투표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로서 영남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역주의의 출발점인인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해소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경제인식에 초점을 맞췄다. 본 논문의 분석모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거 기간에 발생했던 다른 이슈들이나 경제 이외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경제투표를 분석하는 데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항목이 빠져 있다. 정교한 분석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이나 여당의 책임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나 여당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개념은 상호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측정지표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정한울 2007;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 후에 치러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경제인식이 분명할 경우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경제투표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줬다. 즉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는 경우 다음번 선거에서 여당 출신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 다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Lewis-Beck and Paldam 2000; Paldam 1991)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한국의 선거 III』. 조중빈 편. 서울: 푸른길.
- 김 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한국의 선거 V』. 어수영 편. 서울: 오름.
- 김재한. 1993. “제14대 대선과 한국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 99-120.
- 동아시아연구원. 2007. “EAI 여론브리핑 제19호,” <http://www.eai.or.kr/eaipics/EAI%20제5차%20대선패널조사%20브리핑.PDF> (검색일: 2008/02/25).
- 박경산. 1993. “한국 선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선거 I』. 이남영 편. 서울: 나남.
- \_\_\_\_\_. 1993.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 185-208.
- 이동윤. 1996. “한국에 있어서 선거가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경기순환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33-279.
- 이은국. 1999. “한국의 선거와 경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의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3호, 5-26.
- \_\_\_\_\_. 2001.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경제.” 『사회과학논집』 제32집, 41-66.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_\_\_\_\_. 2006.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한국의 선거 V』. 어수영 편. 서울: 오름.
- 정한울. 2007.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이내영·이현우·김장수 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93-212.
- 『세계일보』. 2007년 12월 20일.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Duch, Raymond. 2001. “A Developmental Model of Heterogeneous Economic Voting in New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95-910.

- Erikson, Robert, and Kent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s, and Impact*. New York: Pearson Longman.
- Fiorina, Morris.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lasgow, Garrett. 2005. "Evidence of Group-Based Economic Voting: NAFTA and Union Households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8(3): 427-434.
- Hellwig, Timothy. 2001. "Interdependence, Government Constraints, and Economic Voting." *Journal of Politics* 63(4): 1141-1162.
- Jhee, Byong-Kuen, and Geiguen Shin. 2007.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Voting Behavior: A Case of Study of Korea." *Korea Observer* 38(1): 33-63.
- Keiwiet, Roderick.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448-459.
- Keiwiet, Roderick. 1983. *Macroeconomics and Micro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Chae-Han. 1999.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An Examination of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Jongryn Mo and Chung-in Moon, eds. *Democracy and the Korean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Kinder, Donald, and Walter Bebane Jr. 1983. "Politics and Economics in Everyday Life." Kristen Monroe, eds. *The Political Process and Economic Change*. New York: Agathon Press.
- Lewis-Beck, Michael,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Lewis-Beck, Michael, and Martin Paldam. 2000. "Economic Voting: An Introduction." *Electoral Studies* 19: 113-121.
- Paldam, Martin. 1991. "How Robust Is the Vote Function? A Study of Seventeen nations Over Four Decades." In Helmut Norpoth, Michael Lewis-Beck and Jean-Dominique Lafay, eds., *Economics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1990. *Macroeconomic Policy, Credibility and Poli-*



*tics*. New York: Harwood Academic Publishers.

Rogoff, Kenneth. 1995. "Equilibrium Political Budget Cycles." Torsten Persson and Guido Tabellini, eds. *Money and Fiscal Policy, Vol 2: Politics*. Cambridge, MIT Press.

Rudolph, Thomas. 2003. "Who'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The Formation and Consequence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698-713.

[ABSTRACT]

## Economic Voting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Economic Perception and Voting Behavior

Lee, Jae-chul | Sogang University

The value of economic issue, highlighted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has significantly impacted on voters' electoral decisions. In the election, Lee Myung Bak, a former CEO of Hyundai, was chosen as a president in hopes that he would booster the sagging economy. Utilizing the survey conducted after the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voting behavior is related with voter's perception on national economic and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First,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voting behavior is attributed to prospective voting rather than to retrospective voting. Korean voters punished Roh Moo Hyun government that failed to distribute satisfactory economic outcome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influence of punishment on the election is less than the great anticipation to boost the country's economy on Lee Myung Bak.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voters asses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based upon perception of national and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 However, the influence on election outcome is more closely related with the former than the latter. Third, empirical result confirms that regionalism has been diluted in this election. Influence of regionalism on voting behavior is equal to or less than the one of voters' economic perception.

---

**Key Words** | economic voting, presidential election, retrospective voting, prospective voting, pocketbook voting, sociotropic voting